

영구채 처리·노조 반대 ‘가시밭길’… 매각 무산 가능성 커져

HMM 인수 협상

하림, 1차 협상 연장기한 마감 임박
영구채 유예 주장… 산은 “수용불가”
공정성 문제 등 부결 전망 우세

HMM 매각을 두고 KDB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매각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산은·해진공과 하림·JKL컨소시엄은 1차 협상 기한인 지난달 23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달 6일까지 시한을 2주 연장했다. 6일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본계약 체결은 무산 수순을 밟게 된다.

양측이 갈등하고 있는 이유는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하고 있는 1조6800억원



HMM 컨테이너선 블레스호

/뉴시스

의 영구채 처리방안이다. 하림 측은 영구채 주식 전환의 3년간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산은 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림의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달라는 요구를 산은이 받아들일 경

우 인수전에 참전했던 동원그룹의 법적 대응을 비롯해 배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반발이 커질 수 있어 사실상 협상 타결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하림은 HMM을 인수하기 위해

6조4000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조달은 하림그룹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 1조6000억원에 팬오션 선유상증자, 인수금융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본계약을 체결하면 하림의 지분은 57.9%로 높아지면서 연간 추산 배당금으로 약 2895억원씩 3년간 약 8685억원을 챙길 수 있다. 하림 측으로선 최대한 많은 배당금을 챙겨 그룹 전체에 번질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막는 것이 필수적이다.

반면, 산은 측은 1조6800억원의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식으로 바꾸면 3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HMM의 매각을 위해 하림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또 동원이 영구채 주식 전환을 가

정하고 입찰 금액을 6조2000억원으로 써낸 만큼 3년 유예 조건을 받아들이면 매각 공정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노조의 매각 반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HMM해림연합노동조합은 지난달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1~2차 조정 이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HMM의 양대 노조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HMM지부(육상노조)도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림이 HMM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노조가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단체행동 수위를 높여가면 하림이 HMM을 운영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3D D램’ 등 신기술 개발 본격화… 차세대 반도체 시장 연다

세미콘코리아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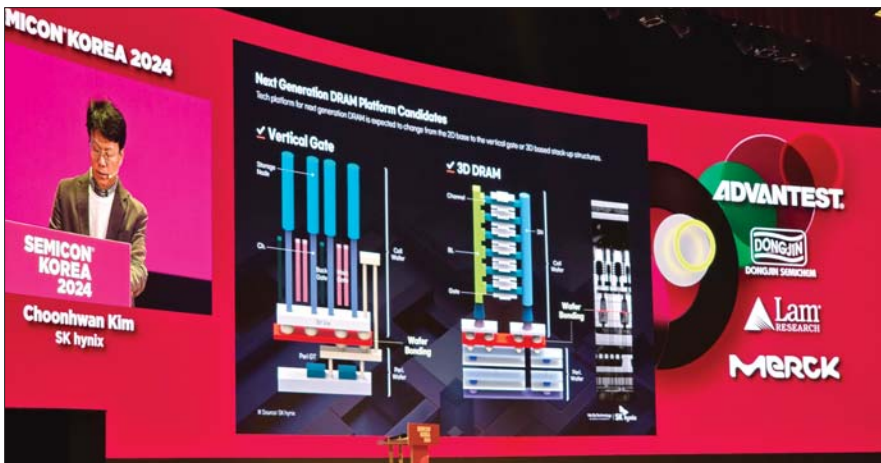
삼성·SK 등 미래 반도체 계획 발표
조직확대 개편… 공정 로드맵 구체화

반도체가 다시 무한 경쟁에 돌입한다. 미세 공정 한계 속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을 본격화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김춘환 부사장은 지난달 개막한 세미콘코리아 2024 기조연설을 맡아 미래 반도체 발전 계획을 밝혔다.

생성형 AI로 다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 미세 공정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3D D램과 버티컬(수직) 게이트, 하이브리드 본딩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부사장은 10나노 이하 D램, 400단 이상 낸드플래시부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HBM3E에 이어 2026년 HBM4 양산 계획도 함께 소개



SK하이닉스 김춘환 부사장이 버티컬게이트와 3D D램을 소개하고 있다.

했다.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패키징 기술 확대도 예고했다.

김 부사장뿐 아니다. 이번 세미콘에서는 새로운 반도체 구조와 이를 위한 소재 및 장비 기술, 최첨단 패키징에 활용할 수 있는 소부장 업체들도 나섰다. ASML은 물론 TC본딩 장비 업체인 한미반도체와 HBM 테스트 장비 기업인 넥스틴, 그리고 SK엔펠스 등이 차세대

기술을 소개했다.

컨퍼런스에서도 차세대 공정과 기술에 대한 관심은 이어졌다. 특히 HBM과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중요성이 높아진 CMP와 세정 공정에 대한 자리도 따로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imec 등 글로벌 관련 업체가 참가해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EUV 고도화와 3D 구조에서

도 사용할 수 있는 에칭 방법 ‘고종횡비 컨택(HARC)’ 등도 논의됐다. 미세 공정과 관련한 내용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은 모습이다. 원자층까지 활용한 증착과 에칭, 차세대 금속 소재를 활용한 도핑과 평면형 게이트 구조인 BCAT(Buried Cell Array Transistor) 고도화 방법 등도 제시됐다.

한동안 침체에 빠졌던 반도체 업계가 모처럼 차세대 공정 경쟁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시장 변화다. 지난해 반도체 시장 침체로 첨단 공정 개발 비용 조차 부담이었지만, AI를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HBM 등 고성능 반도체는 이미 공급 부족이 심화된 상태다.

오랜 부진에 빠져있던 서버 업계도 최근 들어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아마존까지도 클라우드 사업을 중심으로 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AI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반도체를 대거 확

보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반도체 업계도 이미 서버용 수요 증가를 확인한 상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최근 컨퍼런스를 통해 서버용 제품이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HBM은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도 추가 공급이 어려울 수 있고, 낸드플래시도 서버 업계가 다시 스토리지를 늘리면서 재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분위기”라며 “향후 5년 정도는 AI 서버와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를 얼마나 좋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는 사업 구조를 바꾸고 첨단 기술 경쟁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HBM 성공을 발판으로 관련 조직 규모를 당초보다 대폭 늘리면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HBM 경쟁 추격과 함께 3D D램과 4F 스캐어 등 미세 공정 로드맵을 구체화하며 ‘조격자’를 다시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다.

/김재용 기자 juk@

정부,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필수의료분야 수가 집중 인상”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성과중심 보상… 의료 질 저하 방지”

정부가 앞으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할 때 필수의료와 환자의 병환 개선 정도 등 성과를 중심으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자를 많이 받을 수록 수가가 늘어나는 ‘행위별 수가제’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의료 질 저하, 이른바 ‘3분 진료’가 사라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골자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으며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필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약품 부족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진료행위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 일변도였던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

라 책정되는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필수의료 분야 항목은 상대가치·환산지수를 연계해 상향 조정한다. 고평가 항목은 수가 동결이 원칙이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 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로는 충분히 보상할 수 없었던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곱해서 수가를 산정했다면 여기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더해서 산정하게 된다.

또한 진료의 양보다는 의료의 질,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주로 어린이 공

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2028년에는 과소진료 등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의 ‘신포괄수가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해 적용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해나간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부담하는 형태의 포괄수가로, 수술·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각각 보상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건보재정에 ‘혁신계정’을 도입해 이 같은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는데 총요양급여 비용의 2%, 약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심사·평가도 의료자원의 공급보다 성과 중심의 통합체계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약 1조5000억원의 평가 재원도 조성한다.

건강관리 등 예방부터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이르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

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도 강화한다.

연간 의료 이용이 적어 건보 혜택을 보지 못한 가입자들에게는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 10%를 연 12만원 한도의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맞춤형 건강검진 및 다제약물 관리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며 노년층 욕구에 부합하는 거주지 중심 생애 말기 의료 지원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연 소득이 336만원 미만인 경우 건보료 체납이 있더라도 의료 이용 시 건보 혜택 제한을 최소화한다. 암,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은 완화해나가고 급성기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확대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